기후변화 국내이슈

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완료

◈ 기후에너지환경부, 향후 5년간('26~'30) 온실가스 배출권 23억 6,299만 톤, 772개 기업에 할당

□ 개요

○ 배경

- **(국가 감축목표 연계)** 제4차 계획기간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('18년 대비 '35년 △53%~△61% 감축) 달성을 위한 핵심 이행 구간
- **(배출권 할당의 역할)**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을 관리하며 배출권 거래 시장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 분배와 감축을 유도하는 중요한 수단

○ 배출권 할당 및 산정 근거

- **(배출권 할당)**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('26~'30)에서 총 772개 기업을 대상으로 23억 6,299만 톤의 배출권 할당
- **(산정 근거)** '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('25. 11. 11.)'에 따라 산정,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됨

□ 제4차 계획기간 주요 내용

○ 할당 방식

- **(무상할당 배출권)** 기업들은 향후 5년간의 사전할당량* 중 연도별로 무상할당 배출권(KAU26~30)을 배분받음
- **(유상할당 배출권)** 유상할당** 배출권은 정부가 보유하면서 4차 계획기간 동안 경매의 형식으로 공급

* 배출허용총량 중 예비분을 제외한 수량만이 유당할당 배출권으로 경매에 공급

** 유상할당 비율: (발전) '26 15% → '27 20% → '28 30% → '29 40% → '30 50%, (발전外) 15%

○ 운영 부문

- **(발전부문)** 전력을 생산, 판매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, 59개 기업에게 7억 9,575만 톤을 할당
- **(발전外부문)** 산업·수송·건물 등 발전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, 713개 기업에게 15억 6,724만 톤을 할당

< 4차 계획기간 부문별 할당량 >

(단위: 개, 톤)

부문	업체수	대상 사업장	사전할당량
발전	59	211	795,754,468
발전外	713	10,327	1,567,240,148
합계	**772**	**10,538**	**2,362,994,616**

※ 출처 :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(2026~2030) 배출권 할당 완료(기후에너지환경부, 2025. 12. 28.)

□ 제3차 계획기간 과잉 할당 회수

○ **(회수 계획)** 4기 할당 계획과 함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된 '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'에 따라 3차 계획기간('21~'25) 전환(발전) 부문에 과잉 할당*된 배출권 2,395만 톤**을 대상 기업으로부터 회수

* 에너지통계가 정정됨에 따라 재산정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('16~'22)를 반영

** 과잉 할당량 2,520만 톤 중 정부 보유 예비분 삭감량(125만 톤) 제외

○ **(분할납부 허용)** 3기 잔여기간, 배출권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업들이 사전에 제출한 납부계획에 따라 4기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할 계획

□ 할당량 통보 및 이의 신청

○ **(할당량 통보)** 이번에 결정된 기업별 배출권 할당량 및 회수량은 '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(NGMS, ngms.gir.go.kr)'을 통해 해당 기업에 통보

○ **(이의 신청)** 할당량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'26년 1월 말까지 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 가능

□ 향후 계획

○ **(기업 간담회 개최)**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업들이 4차 계획기간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분기별 간담회*를 개최하여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방향 및 지원방안을 발굴하는 등 소통을 지속할 계획

* 기후에너지정책실장 주재 킥오프 회의 기개최('25.12.4., 업종별 협회 및 기업)

기후변화 해외이슈

미국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 약화 및 정책 방향 전망

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파리협정 탈퇴를 지시, 환경보호청(EPA)은 온실가스배출 제한하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각종 규제 철폐

□ 개요

○ **(파리협정 탈퇴)** '25년 1월,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파리협정 탈퇴 지시

- UNFCCC에 의거한 모든 합의, 협정, 유사 의무로부터 미국의 탈퇴를 통지
- 미국이 대외적으로 약속한 모든 자금 지원을 즉시 중단 또는 철회

○ **(이념적 기후 정책 차단)** '25년 4월, 미국의 에너지 지배, 경제성장, 국가안보 등을 위협하는 기후변화·에너지 정책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차단

- 모든 전력을 풍력, 태양광, 기타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미시간, 콜로라도, 미네소타 주의 법률을 겨냥
- 캘리포니아, 워싱턴, 미국 북동부의 여러 주가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에 비용을 부과하는 정책도 공격*

* 특히, 캘리포니아의 배출권 거래제를 지목하며 기업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비난

- 또한, 석탄·석유·가스 등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배출 기업들에 재정적 책임을 묻는 뉴욕과 버몬트 주의 법률도 문제 제기

□ 주요 내용

○ **(온실가스 규제 철폐)** '25년 6월, 미국 환경보호청(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, EPA)은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전임 행정부의 규제 **철폐**

-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적 이익과 환경보호 사이의 균형을 추구한다고 발표

○ **(위해성 판단 철회)** '25년 7월, EPA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각종 규제의 법적 근거가 되어 온 '위해성 판단(endangerment finding)' **철회**를 제안·추진

- '09년, EPA는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를 위협한다는 '위해성 판단'을 발표
-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EPA는 의회가 CAA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할 권한을 EPA에 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

○ **(보고의무 폐지)** '25년 9월, 주요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의무 **폐지**

- '온실가스 보고 프로그램(Greenhouse Gas Reporting Program)'은 47개 배출원 범주를 포함한 8,000개 시설 및 공급업자*에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 및 제출하도록 요구

* 발전소, 정유소, 화학공장, 화석연료 및 산업용 가스 공급업자 등

- 이산화탄소 주입 사이트도 포함, 대규모 배출원이 아닌 기업은 보고 의무 없음

○ **(자동차 배기가스 규정 철회)** '25년 12월, EPA가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 수립된 승용차와 트럭의 연비 및 배기가스 규정을 **철회**

- 트럼프 대통령은 '31년 기업평균연비(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, CAFE)를 갤런당 34.5마일로 낮출 것을 지시

- 또한,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행정부의 기준이 자동차 제조사들이 고비용 기술을 적용해 자동차를 만들도록 강요, 자동차 가격 상승과 품질 저하

○ **(배출기준 강화 규정 폐기)** EPA는 발전소의 초미세먼지(fine particulate matter, PM) 배출 기준을 강화하려던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규정을 **폐기**

- EPA는 '26년 2월 7일로 지정된 기한 전에 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화 할 것을 요청

○ **(메탄 배출 제한 규정 연기)** '25년 11월, EPA는 석유 가스 산업에 대해 메탄 배출을 제한하는 규정 시행을 **연기**

-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 확정된 규정에 따르면, 석유·가스 기업들은 '25년부터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메탄의 양을 감축하기 시작했어야 함

- 규정 시행 시기를 '27년 1월로 연기하고, 이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 검토

□ 향후 전망

○ **(점진적 규제 완화)** 기후변화 대응 조치를 철회하고, 전통 에너지 산업 부양

○ **(기후 재정 지원 축소)** 파리협정 탈퇴에 따라,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후 재정 지원과 에너지 전환 기술 지원 축소

○ **(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축소)** 석탄 화력 발전소의 재가동과 천연가스 기반 발전의 지속으로 단기적 에너지 안정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

○ **(글로벌 기후 목표 달성 난관)** 에너지 시장 영향력이 막대한 미국의 이탈로 2050 NDC 목표 달성에 단기적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높음

<출처>

1. 기후변화대응 부문

○ 국내이슈 <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완료>

-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(2026~2030) 배출권 할당 완료(기후에너지환경부, 2025. 12. 28.)

○ 해외이슈 <미국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 약화 및 정책 방향 전망>

- 기후변화 대응 조치 철회 및 기후·환경규제 약화(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5-24호, 2025. 12. 29.)